

軍 ‘방탄복’ 3년째 납품지체... 최저가입찰 체계에 악순환

방탄복에美 ‘IOTV’ 개념 적용
목 방호부분, 전술에 방해되고
‘몰리’ 홀수 제작에 균등부착 못해
단기간 대량납품, 납기지연 반복
업계 “사실상 군서 부실납품 방조”



2014년지상군페스티벌에 전시된 다목적 방탄복과 미군의 IOTV방탄복. 미군을 본 뜬 디자인이지만, 전술적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형상이다. /문형철 기자



국군 장병들을 총탄으로부터 지켜 줄 ‘다목적방탄복’이 3년째 납품이 지체되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 다목적 방탄복을 납품하는 S사는 2019년에 이어 2020년 계약분도 제 때 납품하지 못했다.

19일 복수의 군 및 군수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S사는 2020년 계약분에 적용된 구매요구도(일부 매체는 ROC로 잘못 표기) 중 하나인 ‘유연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제 때 납품을 하지 못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해 1월 9일 ‘군수품 조달체계, 군과 기업 상생위해 개선돼야’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S사가 2019년도 계약분을 납기일까지 납품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목적 방탄복 태생부터 논란

다목적 방탄복은 태생부터가 논란이었던 개인방호장비다. 2014년 군 당국이 보급을 실시한 다목적 방탄복은 미 육군이 채용한 ‘IOTV 방탄복’의 개념을 적용했지만, 기능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형상적으로는 ‘몰리(MOLLE)’라고 불리는 줄칸 형태의 웨빙이 홀수로 제작돼 다양한 임무에 맞춰 부착할 수 있는 파우치(주머니)를 균등하게 부착할 수 없다. 통상 미국 등 외국군의 경우 짝수로 호환이 용이한 규격을 갖추고 있다. 미군 등은 이 규격에 따라 파우치보다 경량화되고 후대가 편리한 ‘체스트 리그’도 탈부착할 수 있지만, ‘다목적 방탄복은 전투조끼를 덧대어 입거나, 전투조끼에 부착된 파우치를 일일이 옮겨서 부착해야 한다.

일반 보병 등이 파편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설계된 IOTV의 설계개념을 적용했지만, 목 부위를 방호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크고 앞으로 쏠려있어 전술적 행동을 방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다목적방탄복과 관련된 가장 큰 논란

은 2016년 3월 23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드러난 방탄능력의 문제였다. 당시 감사원은 “2014년부터 도입한 다목적 방탄복이 북한군의 AK-74소총의 철갑탄(철심이 탄자에 든 탄)을 방호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 관계자는 철심탄의 철이 ‘뚫을 철(徹)’이 아닌 ‘쇠 철(鐵)’로 이해했고, 방탄복의 국제표준 규격인 미 법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의 NIJ 등급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미국 등 선진국 국가들은 이미 민간 기준인 NIJ 등급과 다른 독자적인 군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개발사였던 업체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와 유착관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이은 납기지연, 조달체계가 원인

2018년 다목적 방탄복 납품 계약을 따낸 E사는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물게 됐다. 이 배경에는 짧은 기간 내에 대량의 방탄복을 납기해야 하는 계약조건도 큰 원인이었다. 납품 수량에 대한 문제의 지적이 나오자, 군 당국은 납품 수량을 2차례로 나누는 것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2019년 다목적 방탄복 납품 계약과 관련해 방사청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체가 생산능력을 초과해 무리하게 입찰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방사청도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게 희망납품수량의 우선권을 주는 조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똑 같은 문제는 이어졌다. 익명의 군관계자에 따르면 S사도 납기일을 초과했다. 2019년도 계약분은 그해 12월 20일까지 납기가 완료돼야 했지만, S사는 12월 중순에 국방기술품질원에 성능평가를 받았다, 당시 기품원은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었다며 함구했다.

2020년 S사가 납품해야 하는 수량은 전체의 95.8%인 6만1428벌로 반년이 넘게 미납 상태다. 군 당국은 다목적 방탄복의 대대적인 개선도 없이, 2023년까지 육군 전 장병과 공군 해군 해병대 일부 장병들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더욱이 우리 군의 ‘대체불가 전력’이라고 불리는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원들을 중심으로 보급될 ‘3형 방탄복’은 수년 간에 걸쳐 각기 다른 업체가 납품을 해왔지만 봉제 등 품질의 문제, 방호의 핵심 부위인 킬링 존(KILLING ZONE)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또한 짧은 기간 내에 최저가로 납품을 완료해야 하는 조달체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올해 8월말 입찰결과가 공개될 예정인 3형 방탄복의 신규 납품업체는 낙찰후 4개월 이내에 2만벌을 납품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자재 주문과 품질 검사에만 적게도 2달이 소요된다. 사실상 부실납품을 군 당국이 방조하거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사업추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metroseoul.co.kr

건설현장 10곳 중 7곳 ‘추락사고 무방비’

고용노동부, 3545곳 대상 일제점검
2448곳 ‘안전조치 미흡’ 시정요구

전국 건설 현장의 10곳 중 7곳은 안전난간이 없고, 안전모도 쓰지 않는 등 추락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전국 354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70%가량이 안전조치가 미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체 현장 중 2448곳(69.1%)이 안전조치가 미흡해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중 추락을 막는 안전난간 미설치가 166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1156곳, 작업 발판 미설치 834곳, 추락

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347곳 등의 순으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전체 점검의 86.9%인 3080곳은 10억 미만 건설 현장이었다. 10억 이상 건설 현장은 465개소로 13.1%에 불과했다. 소규모 건설 사업장일수록 안전 조치가 미흡해 추락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위험을 방지한 정도가 심해 사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3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개인 보호구를 쓰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정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건설·제조업 현장의 추락 및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건설 현장에 박화진 고용부 차관을 비롯해 850여개 팀이 투입됐다.

고용부는 오는 28일에는 ‘끼임’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점검일에 대한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일제 점검 결과 소규모 건설 현장임을 고려해도 3분의 2가 넘는 곳에서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지적됐다”며 “작업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상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난간, 작업 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의료기관 등 코로나 손실보상 신속집행”

홍남기 부총리, 보라매병원 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속 확대해왔다”며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보라매병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9000억원을 포함 백신·방역 예산 4조 4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홍 부총리는 “의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두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것”이라며 이들을 격려하며 노고에 감사사를 전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보라매병원을 찾아 의료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 현황 등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또 올여름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예상돼 의료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진들은 폭염 상황에서도 방호복을 챙겨 입어야 하므로 현장 피로도가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의료진에 대한 폭염 대책을 더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호주·아태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과 협력방안 논의

정부가 호주와 아태 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 히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확대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19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테 대한 호주 통상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최근 부각되는 다양한 디지털 이슈들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프레임워크 구축이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런 배경에서 아태 역내 주요국간 새로운 디지털 무역규범 추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새로운 협정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함께 AI(인공지능),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포괄해야 한다는 점



에 공감했다. 아울러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한-호 자유무역협정(FTA)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WTO, APEC 등 다자간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무역과 보건, 무역과 환경 등의 이슈에서도 적극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히토류와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세종=원승수 기자 hys@

“인구밀집 산업단지, 방역협조 필요”

문승욱 장관, 구로 산업단지 방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시 구로구 대동3차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센터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입주기업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휴가철 일정이나 장소를 분산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 등 정부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추가적으로, 휴가복귀자의 방역관리 등 강화된 자체 방역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산업단지공단과의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까다로운 곳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방역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랜 기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이 지켜 있지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거리두기 등 생활속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입주기업 직원들이 일정과 장소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원승수 기자